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4. 18.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발 의 자: 이선주 의원 등 10명(이선주, 정순옥, 정창근, 도하석, 남현주, 박종길, 황국주, 김장관, 이진환, 손범구)
- 발의일자: 2024. 4. 5.(금)
- 회부일자: 2024. 4. 5.(금)
- 상정 및 의결: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 4. 18.)

2. 제정이유

- 가. 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나. 2021년 12월 21일에 일부개정되어 2023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의5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공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 「지역보건법」 제11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4. 5. ~ 2024. 4. 15.)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4월 초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북)를 포함한 105개 자치단체에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2025년 세계 인구의 60.1%(선진국 77.8%, 개발도상국 56.5%)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UN, 1987)되는 상황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환경, 계층 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1986년 이후 “도시건강정책”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0여 개 도시에서 이를 시행함.
-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도시 거주민의 건강, 환경, 계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